

이재명 '전두환 사망' 국면 선명성 부각...호남 세몰이 채비

“조문계획 없다” 처음부터 선 그어 윤석열과 차별화...주말 호남 방문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 투자 일자리 200만개 창출할 것”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을 계기로 선명성을 부각하며 현 여권의 최대 표밭인 호남권 세몰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니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게 맞겠다”면서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다.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조문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애초 조문 의사를 내비쳤다가 철회했고, 민주당 역시 호칭·조문 계획 등 입장에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이 후보는 애초부터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달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배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는 옹호성 발언으로 잔뜩 곤욕을 치른 윤 후보와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때마침 이 후보가 이번 주말 2박 3일 일정의 광주·전남 지역 방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선명성 부각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지역순회 세 번째 일정인 이번 광주·전남 방문에서 이 후보는 광주선대위 출범 등을 통해 지역 세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이 지역은 민주당의 심장부이자 ‘집토끼’의 본거지로 역대 대선 때마다 민주당 계열 후보에게 불표를 보내왔지만, 아직은 경선 후폭풍 등 여파로 지지

세가 무르익지 않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판단이다.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는 남편보다 앞서 이 지역을 찾아 사전 정치작업에 나섰다. 김 씨는 이날 광주 소화자매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기리는 연례행사에 참석했으며, 24일에는 여수 특성과 고재학 중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홍정운 군의 49세 추모식에 자리한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국가 재정과 지방, 민간 재원 등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당선 후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 참여 30조원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이 후보가 선대위 출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공약 발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최대 현안인 선대위 쇄신에 대해서는 일단 수많은 ‘공통’ 직함을 통해 책임·권한을 명료하게 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해 ‘울드한’ 이미지를 일신하는 방향으로 기막을 잡고 이번 주 내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건인 외부 인사 영입이 여의치 않다는 게 여전히 걸림돌이다. 소속 의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소문하고 있지만 애초 목표한 젊고 신선한 인물이 쉽게 물색되지 않는 상황으로, 일단 외부 인사의 공강을 비워놓은 채 ‘개문발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강 대 강’ 충돌에...윤석열 선대위 ‘김종인 원톱’ 구상 좌초

김병준·김한길 투톱 가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우는 방식의 ‘윤석열 선대위’ 구상이 좌초하는 흐름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사투 다른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두 사람이 강대강 충돌 양상을 보이는 만큼 조기통합은 물론이거니와 수습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는 굽히지 않는 분위기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새 선대위 인선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출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 측은 김 전 위원장이 성공적인 캠페인을 통한 정권 교체보다 선대위 해계모니 전략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

인다. 선대위를 당 중심으로 꾸리되 그 최고 사령탑은 후보이며, 인선과 조직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당연히 후보에게 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대선 승리에 여러 차례 기여해온 김 전 위원장의 능력과 경륜을 존중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왔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1일 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의 인선을 보류하라고 요구하고 윤 후보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둘의 관계도 파국으로 치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측은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채우지 않고, 일단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로 선대위를 ‘개문발차’할 방침이다.

김 전 위원장도 강경해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 광화문 개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더이상 정

치 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가 경선 캠프 시절 의지했던 서너 명의 측근에게 둘러싸여 신선한 인물을 중용하지 못하고, ‘그 나물에 그 밥’인 선대위를 꾸리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3김(金)’으로 엮인 데 대해 역정을 부리는 것만 일부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김 전 위원장 측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극적인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윤 후보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고 당 안팎에서 선대위 쇄신 요구가 빗발치지 않는 한 그가 먼저 김 전 위원장을 다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민주 “종부세는 폭격 아닌 정밀타격”

‘세금폭탄’ 프레임 깨기...대선 악재될까 대응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둘러싼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이 “세금 쓰나미”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이슈가 대선 국면에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은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국민 대부분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서 종부세를 자동차세와 비교하면서 “종부세 폭탄론”을 정면 반박했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다. 쏘나타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즉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며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

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닌 정밀타격”이라고 해명을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라며 “시가 16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됐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 세 부담을 크지 않게 설계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위해 종부세에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화살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들렸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처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부동산 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2% 부자를 위해 감세하겠다는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투기 수요를 제어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소멸을 막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현지 보고 단순첩보로 간과” 박지원 요소수 사태 사과

박지원 국가정보위원장은 23일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현지 정보관이 보고했지만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

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보위원들은 “이것이 국정원이 과연 사과할 문제다. 신(新)안보 분야 정보 수집권이 없는데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해외 정보관 파견국에 대해 “중국”이라고 설명했다. 첩보 보고 시점에 대해

선 “중국에서 예고를 하지 않았다. 그 언저리”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요소수 사태 외에도 일본의 경제 보복, 코로나 사태 등 신안보 분야와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에)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현재까지 다른 기관에서 (정보 수집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한 수집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